



클릭 한 번이면 끝나는 '숲 가꾸기 신청'

- 산림청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가능해져...진행사항·처리결과도 메일통보 -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이달부터 숲 가꾸기를 희망하는 산주가 온라인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숲 가꾸기를 신청할 수 서비스를 시작했다.

숲 가꾸기 신청 온라인서비스란 숲 가꾸기를 희망하는 산주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서 사업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산림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검토한 뒤 숲 가꾸기를 추진하는 시스템이다. 산림청은 신청서 검토 진행사항 및 처리 결과도 산주에게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알려줄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숲 가꾸기를 신청하려면 사업신청서를 해당 지자체에 직접 제출하거나 지자체가 산주에게 우편으로 사업동의서를 받는 형태만 가능했었다.

신청방법은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산림자원→숲 가꾸기→사업신청→진행현황확인 순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상의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숲 가꾸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면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숲 가꾸기 사업도 확대될 것"이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숲 가꾸기는 숲의 연령과 상태에 따라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의 작업을 통해 숲의 가치와 생태적 건강성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산림청은 매년 25만ha 규모의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UNCCD D-100 "아시아 사막화 심각성 알린다"

- 역대 최대규모 총회준비 '이상 없음'...건조지 파트너십추진 계획 -

산림청(청장 이돈구) UNCCD 준비기획단은 오는 10월 10일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0차 총회 개최 100일을 앞둔 2일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아시아 지역 사막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막화 방지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총회는 세계 194개 당사국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 대표를 비롯해 UNFCC, UNCCD, UNEP, IUCN, GEF FAO 등 세계 환경 관련기구와 NGO, 기업 관계자 등 3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2009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9차 총회에는 1000여 명이 참석한 바 있다.

산림청은 이번 총회에서 의장국의 위치를 활용해 개발도상국 사막화 방지에 실질적 도움이 될 '건조지 녹색성장 파트너십' 구축을 주창할 계

획이다. 사막화가 일어나는 개도국 현지 맞춤형 사업으로 수혜국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황사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황사 방지 파트너십'을 구축해 관련 국가들이 황사 발원지의 토양 안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할 계획도 마련했다.

이번 총회 때는 UNCCD 사상 처음으로 '비즈니스 포럼'도 열린다. 개도국 사막화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UNCCD 차원의 관심을 넘어 글로벌 기업의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박중호 UNCCD 준비기획단장은 "총회를 계기로 사막화 문제의 심각성과 아시아지역 사막화 문제에 관한 국제 사회 관심과 공조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며 "UNCCD 총회를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녹색성장 국가로 한걸음 더 나아가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30ha 이상 산지전용 땀 타당성 조사 받아야

- 7월부터 바뀌는 산림정책...산지복구에도 감리제 도입, 숲길훼손 처벌강화 -

7월부터는 30ha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사용하려면 미리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 전용하거나 일시 사용했던 산지를 복구할 때는 전문가로부터 복구 적정성에 대한 감리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산양삼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가 이뤄지고 숲길 주변에서의 훼손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이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을 확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제도와 산지복구 감리제도가 도입된다는 점이다. 30ha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사용 하려면 미리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그 전용이 타당한지 조사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30ha가 넘는 산지의 전용하거나 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려면 산지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타당성조사 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지전문기관이 모두 공개해야 한다.

또 산지전용·일시사용·토석채취 후 복구를 한 경우 복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산지복구 감리제도도 새로 생겼다. 그동안 산지 복구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담당 공무원이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를 해 체계적 복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달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일정 면적 이상의 산지복구 공사에는 산림기술사 등 전문인력이 감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산양삼 품질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숲길 주변의 각종 훼손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특별거래임산물인 산양삼은 그동안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해 거래되고 잔류농약·중금속 오염 등에 대한 보도가 자주 나와 소비자 신뢰가 저하되고 선량한 생산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많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생산적합성조사·생산신고·품질검사·품질표시 등 품질관리제도가 시행된다.

숲길이나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와 처벌규정도 마련됐다. 숲길을 훼손하거나 근처 다른 사람의 건조물·농작물 등의 손괴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오물 투기, 포시판 이전·파손 등의 행위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도 완화됐다. 법인등록때 법인 종류별로 각각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는 현 규정과는 달리 사무실 면적기준이 폐지되고 둘 이상의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면 자본금 및 기술인력 중복을 인정하는 특례제도가 시행된다.

김남균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조치는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만들고 각종 산림사업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에서 시

행되는 것"이라며 "편리하고 효율적인 산림정책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 각별히 주의하세요”

- 산림청, “위험지 점검하고 특보 발령하라” 시달...
“집중호우로 대형 피해 우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안전한 지역으로 사전 대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7일부터 장마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전국에 걸쳐 최고 5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고 지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어 산사태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특히, 산지와 인접한 주택·건물 등은 산사태 피해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해당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사태 특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하도록 시달하고 담당 공무원에게는 위험지역 점검을 강화하고 주민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 안내하도록 지시했다.

산림청은 또 국민들에게 이번 비가 끝날 때까지 등산이나 산림휴양활동 등을 자제해 줄 것도 당부했다. 집중호우 때 산에 들어가면 계곡 급류에 의한 사고, 산사태나 낙석에 의한 사고 우려가 커 인명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명수 산림청 치산복원과장은 “연일 계속된 집중호우로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라 비가 조금만 더 오더라도 대형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기생산용 산림 바이오매스 공급 늘린다

- 산림청, 19일 남동발전과도 목질계 연료활용 MOU...
“공급 총량 늘릴 것” -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21일 오전 전남 여수 중흥동 여수화력발전소에서 한국남동발전과 산림바이오매스 이용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돈구 산림청장과 장도수 남동발전사장은 박준영 전라남도지사와 3자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이뤄진 이날 행사에서 유력한 신·재생 에너지로 떠오른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의 보급과 이용 촉진에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 청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업무협약으로 남동발전은 효율적인 에너지원인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원활히 공급받을 방안을 마련했고 전남도는 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게 됐다”며 “산림청은 발전 분야에서 목재 사용을 늘리는 한편, 목재 자원이 발전 분야에만 편중돼 기존의 목재산업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목재생산 총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달 한국동서발전과 같은 내용의 협약을 맺은 바 있는 산림청은 발전사들과의 잇단 협력관계 구축이 숲가꾸기 산물 수집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목재 생산총량을 늘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제에 따라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는 내년부터 총발전량의 2%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성이 높고 간편한 목재 연료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임상섭 산림청 목재생산과장은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목재가 가장 유력한 신·재생에너지로 평가되고 있다”며 “발전사들이 목

재펠릿 등 나무를 주원료로 하는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바이오매스 수집량을 늘리고 수변구역 에너지림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목재생산 총량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작물 자연재해 복구단가 인상

- 더덕(301%) 대추(106%) 뽕은감(103%) 등 11개 품목 현실화...
비료대도 포함 -

태풍이나 폭설 피해를 입은 산림작물의 복구 때 지원 기준이 되는 복구비용 단가가 품목별로 많게는 300%가 넘게 오르는 등 현실화돼 재배농가의 복구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지금까지 종자·묘목대만 지원하던 데서 비료대를 포함한 가격으로 단가가 조정돼 실제 복구내용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2011년 산림작물 품목별 재해피해 복구비용 단가를 인상해 최근 고시했다. 단가가 인상된 품목은 산림시설 1개, 산림작물 10개 품목이다. 이에 따라 더덕, 대추, 뽕은감, 두릅의 피해 복구 단가는 각각 301%, 106%, 103%, 72% 인상됐다. 호두(65%) 도라지(61%) 등도 60% 이상 올랐다.

산림작물 복구비용 단가는 산림청이 매년 시장 거래가격 등을 조사해 확정·고시한다. 그동안은 복구에 필요한 종자·묘목대의 실제 거래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농작물에 비해 지원단가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녹색성장 중심에 임업후계자가 있다

- 1일부터 함양서 20회 임업후계자전국대회...
후계자·가족 등 3000명 다양한 행사 -

전국의 임업후계자와 가족들이 한데 모여 정보를 나누고 화합을 다지는 행사가 열린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1일부터 3일까지 경남 함양 삼림 숲에서 제20회 전국 임업후계자대회를 연다.

‘녹색성장의 중심에 임업후계자가...’ 및 ‘산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사유림 경영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임업후계자와 가족, 산림청 및 산림조합 관계자 등 3000여명이 참가한다.

행사 기간에는 임업발전 유공자 포상, 성공사례 발표, 전국 임산물 음식 경연, 임업인 체육대회, 임업 관련 유명인사 강의 등의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유공자 포상 행사에서는 임업 발전에 공이 많은 조시현 박성종 이상목씨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표창을, 김진겸 정창교 정양환 김성안 이종산 박양영 심현정 이우형씨가 산림청장 표창을 각각 받는다.

산림청은 이번 대회를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임업후계자들이 나아갈 방향과 산림경영 참여 방향 등을 제시해 임업 발전에 기여하고 임업인의 긍지를 높이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하영효 산림청 차장은 “이번 대회에서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많은 의견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며 “임업인을 섬기고 임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산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